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1면	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 GJC, 의회서 삼자대면…레고랜드 사태 책임론 ...	2
江原日報	01면	제 갈길 가는 道-GJC … 회생 절차 빨라질 듯	3
江原日報	02면	제 갈길 가는 道-GJC … 회생 절차 빨라질 듯	3
江原日報	02면	道 "채무상환 부족액 412억 오롯이 도가 부담" GJC...	4
춘천MBC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 꼭 필요했나?	5
KBS 춘천		5년 만에 행정사무감사...중도공사 ‘ 부실 경영 ’ 질...	6
KBS 춘천		5년 만에 행정사무감사...중도공사 ‘ 부실 경영 ’ 질...	7
G1방송		중도개발공사 행감..여야 '집중질타'[1/2]	8
G1방송		중도개발공사 행감..여야 '집중질타'[2/2]	9
연합뉴스		강원도.GJC, 도의회서 삼자대면...레고랜드 사태 ...	10
연합뉴스		강원도.GJC, 도의회서 삼자대면...레고랜드 사태 ...	11
江原日報	03면	“ 51억 들인 디지털 통합 플랫폼 제대로 사용도 못 ...	1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13
춘천MBC		강원도-국회의원, 내일(10일) 내년 국비 확보 방안 ...	14
KBS 춘천		강정호 도의원 “ 강원도 4년 동안 면세유 점검 안 해...	15
江原日報	02면	“ 해경 인재개발원 삼척시 유치 ” 김진태 지사 · 박상...	16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 삼척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유치 총력전	17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지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	18
江原日報	10면	춘천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19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19
江原日報	11면	횡성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	20
강원도민일보	15면	양구소방서 소방의날 기념행사	20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 한빛청주공장 준공… 지역쌀 날개단다	21
江原日報	03면	與 춘천갑 · 원주을 당협위원장 선출 속도	22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조강특위, 춘천갑 · 원주을 당협위원장직 추가...	23
강원도민일보	01면	국방부 수의계약 비율 묵묵부답, 군납농가들만 답...	24

강원도민일보	02면	제주 특행기관 국가환원 움직임…도, 이양 손익계...	24
강원도민일보	01면	중앙 · 지방정부 채권 최대 상환 국내 금융시장 불안...	25
江原日報	03면	민주당 ‘ 레고랜드사태 ’ 관련 김 지사 고발 검토	2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법조타운 조성 무산되나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늙어가는 강원' 대안 마련해야	28
江原日報	19면	[사설] “ 더 버틸 수 없다 ” 는 중소기업 절규 귀 기울...	29
江原日報	19면	[사설] 코로나19 재유행, 무뎌진 경각심 바로 세워...	30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1면

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9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송상익(사진 앞줄 왼쪽) 중도개발공사 대표와 윤인재(앞줄 오른쪽) 강원도 산업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이날 행감에서는 '레고랜드 쇼크'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서영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도·GJC, 의회서 삼자대면…레고랜드 사태 책임론 평행선

GJC "회생 신청할 정도 아냐"
도 "상환 부족액 412억원 이상"
재정손실 '소통 부재' 두고 이견

'레고랜드 쇼크' 사태를 놓고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간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 "레고랜드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사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발표 당시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며 강원도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송상익 중도개발공사 대표는 9일 열린 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 매매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135억원과 운영비, 이자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가 없어서 대출 약정 만기인 내년 11월 말까지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 강원도의 회생신청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GJC의 채무상환 부족액 412억원이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오롯이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에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서 "도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을 결정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사전에 GJC와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GJC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도의회에선 최문순 전 지사 배임 의혹에 대한 GJC의 동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공사와 강원도는 (법률자문 내용을 통해) 재정손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 도민은 전혀 없었다"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정보를) 가진 쪽이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무철(춘천) 의원도 컨벤션부지 매각 논의가 이뤄질 당시 명의가 GJC가 아닌 강원도 땅이었음을 지적하며 "매각 논의 당시, 이 토지가 도지사 소유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느냐. 도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부분이 명백하게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당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자금사정에 대한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기존에 땅(레고랜드 주변 부지)을 산 사람들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계약자 권리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송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송 대표는 "이분들의 돈으로, (GJC가) 돈이 다 떨어진 시점에서 (기반) 공사를 했던 것"이라며 "값이 올랐다고 해서 계약 무효로 하고 다른 데다 판다는 건 공공기관에서 내세울 거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10일 강원경찰청을 방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최 전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1면

제 갈길 가는 道-GJC … 회생 절차 빨라질 듯

〈강원중도개발공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사안마다 충돌
道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위기"
GJC "회생 발표 당시 외부서 '갚을 생각 없다' 판단"
2,050억 상환한 12월 이후 회생신청 절차 급물살 전망

속보=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인이 됐던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간의 극한 대립이 9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본보 9일자 3면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강원도는 올 12월15일 보증채무 전액 상환 이후 GJC에 대해 회생절차 돌입 등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 전망이어서 향후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열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채권주관사인)BNK투자증권은 강원도의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와 상관없이 (강원도가) 2,050억원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해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ABCP 발행 주체를 부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위기라고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상익 GJC 대표는 발언 기회를 자청해 즉각 반박했다. 송 대표는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발표 문구에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외부에서는 그 문구만 봐서는 '아, 갚을 생각이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며 회생신청 발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대표는 강원도의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기존 하중도 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과거에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다른 데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기존 계약자들이) 소송을 한다거나 실력 행사, 점거를 한다거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강원도에서 GJC에 대해 추진하려는 회생 절차 등의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 강원도와 GJC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도는 아직 GJC의 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도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12월15일 보증채무 상환 직후 신속하게 회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2면

제 갈길 가는 道-GJC 회생절차 빨라질듯 -1면에서 계속

GJC의 빚 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고 나면 GJC 주채권자는 강원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GJC에 대한 도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회생신청 인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강원도의 판단이다.

도는 회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하중도 내 자산 매각을 다시 추진, 2,050억원의 상당수를 회수한다는 복안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회생신청을 위해 여러 의견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2면

道 "채무상환 부족액 412억 오롯이 도가 부담" GJC "내년 만기까지 운영 하등의 지장 없었다"

레고랜드 사태 진실공방

道 "회생신청 발표 채권자 입장 정당한 권리… 협의 의무 아냐"
GJC "토지 매매대금 계속 들어와… 추가 매각협상도 진행 중"

9일 진행된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논란에 논란이 거듭됐다. GJC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GJC와 강원도가 사업의 파트너이고 협업·협조하는 사이라면 강원도가 어떻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GJC의 회생신청 발표를 했는지(궁금하다)"라고 배경을 물었다.

이에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강원도는 채권자 입장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고 사전에 GJC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GJC의 채무 상환 부족액 412억원이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오롯이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회생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최소한 GJC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곧바로 박 의원은 송상익 GJC 대표에게 "GJC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만큼 부채가 심각하고 갚지 못할 정도의 지급 불능 상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그렇지 않다. 토지 매매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또 추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했다"며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135억원과 운영비·이자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약정 만기인 내년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고 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기에 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윤 국장은 "레고랜드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사태"라고 주장한 반면 송 대표는 "발표 당시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은 2018년 7월 엘엘개발(현 GJC)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은 일을 두고 "자문 이유가 도의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닌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급했을 때 발생 가능한 배임 문제 등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임 도정 책임론을 질타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재원 현황에서 총 지출 계획 4,542억원 가운데 금융비용(이자·수수료)이 699억원으로 전체 지출에 15.38%를 차지한다"며 "최초 본협약(UA) 당시 사업에 따른 이자 충당액은 195억원이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은 애초부터 적자가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

2022년 11월 09일 (수)
춘천MBC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 꼭 필요했나?

◀ANC▶

레고랜드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이 회사의 회생 신청을 발표하면서 자금 경색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가 꼭 필요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금융 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온 강원도의 2,050억 원 채무 보증. 이 돈은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와 하중도 개발을 위해 끌어 쓴 자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선 중도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행감에서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급히 발표할 만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냐가 최대 논란이었습니다.

[박윤미/강원도의원]

"부채가 심각하고 이 부채를 갚지 못할 만큼의 지급 불능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도개발공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송상익/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금융 채무 상환에만 쓰면 됐기 때문에 내년 11월 금융 약정 만기까지 운영함에는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윤인재/강원도 산업국장]

"그대로 나뒀을 때 파산으로 갔을 때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고자 신청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논란의 불똥은 금융 시장 자금 경색 사태로도 튀었습니다.

[박윤미/강원도의원]

"채권시장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인재/강원도 산업국장]

"일부 언론사나 금융 기관에서 강원도가 마치 2,050억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동요가 온 것이지..."

애초에 레고랜드가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종호/강원도의원]

"애당초부터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업이다. 높은 이자율, 유적지가 있음을 예측하고 알고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해서..."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회생 신청 발표로 현재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강원도의 회생 신청 방향이 결정되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올해 안에 갚겠다고 말한 2,050억 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END▶(영상취재/김유완)
백승호 bsh@chmbc.co.kr

KBS 춘천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5년 만에 행정사무감사...중도공사 '부실 경영' 질타

[앵커]

레고랜드 조성 사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섭니다.

오늘(9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최근 채권시장 경색의 도화선이 된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이 된 중도개발공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만에 열린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도의원들은 최근 채권시장 혼란의 촉매가 된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경영난과 강원도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놓고, 두 기관이 사실상 '소통 부재'로 사태를 키웠다고 추궁했습니다.

강원도와 중도공사는 확연한 의견 차를 보이며 맞섰습니다.

[윤인재/강원도 산업국장 : "채권자 입장으로서 (기업회생을 신청할)정당한 권리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사전에 중도개발공사와 법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송상익/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 "앞으로는 운영비와 이자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채무상환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 멀린과의 총괄개발협약 당시,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천억 원대 이상의 손실과 배임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KBS 춘천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김기홍/강원도의원 : "중도개발공사랑 강원도는 재정손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민분들은 그런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 지출만 6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무리한 대출을 한 부실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종호/강원도의원 : "금융비용, 이자 및 수수료만 699억. 전체 지출의 15.38% 차지합니다."]

[송상익/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 : "계획보다 과다하게 늘었다는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이 대출금마저도 이미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부분 소진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도의회 앞에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등 중도공사의 부실 경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고순정

G1방송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중도개발공사 행감..여야 '집중질타'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9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터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레고랜드 관련 금융위기를 둘러싸고 여야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5년 만에 진행된 강원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 감사.

중도개발공사의 재정구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레고랜드가 조성된 하중도 개발 사업의 총지출 계획 금액인 4,542억원 중,

이자와 수수료가 15%인 669억원에 달한다며,

사업 자체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높은 이자율, 유적지가 있음을 예측하고 알고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해서 이렇게 기간을 장기간 끌고 왔던 부분"

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초기 금융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이익 채권이 강원도에서 보증한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 끌려가면서 5.3% 고리를 물었던 겁니다."

G1방송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민주당 의원은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이고 강원도가 공사의 1대 주주임에도,

한번 상의도 없이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이나 그전에는 중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채권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냐는 부분에 대해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대출약정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BNK 투자증권에 그런 내용을 강원도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인터뷰]
"아닙니다. 9월 30일 자로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보증채무 이행하겠다"

2025년까지 지어져야 할 유적공원과 박물관에 관해서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법적으로 중도개발공사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도개발공사는 2018년 이래 강원도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09일 (수)
종합

강원도.GJC, 도의회서 삼자대면...레고랜드 사태 입장차 여전

GJC "회생 신청할 정도 아냐"…도 "재정부담 412억 이상"
'소통 부재' 두고도 이견…도의회, 각종 문제점 지적

송상익 GJC 대표(앞줄 왼쪽)와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오른쪽)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레고랜드 사태'의 중심에 선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강원도의회에서 만났으나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9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GJC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송상익 GJC 대표이사는 "회생 신청을 할 만큼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토지 매매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135억원과 운영비, 이자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가 없어서 대출 약정 만기인 내년 11월 말까지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GJC의 채무상환 부족액 412억원이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오롯이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을 결정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사전에 GJC와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GJC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도의원은 "GJC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이고, 1대 주주라면 법적으로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09일 (수)
종합

강원도의회, 강원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 감사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이한영(태백1) 도의원은 "결국 GJC와 강원도가 서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생겼다"고 질타했다.

윤 국장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GJC는 나름대로 도와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도는 소통하려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전임 도정에서는 1주일에 1번 이상은 회의했고, 새 도정이 들어선 뒤에는 보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상급 기관인 도가 소통 채널을 정리해줬어야지, GJC에서 소통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금융위기에 관해서도 윤 국장은 "레고랜드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사태"라고 주장했지만, 송 대표는 "발표 당시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며 견해차를 보였다.

양 기관이 간극을 줄이지 못한 가운데 레고랜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GJC의 회계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김기홍(원주3) 도의원은 2018년 7월 엘엘개발(현 GJC)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은 일을 두고 적절성을 집요하게 따졌다.

국민의힘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GJC의 지출계획 금액 4천542억원 중 대출 이자와 수수료가 612억원(13.5%)인 점을 들어 "레고랜드 사업은 애초부터 적자가 예고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51억 들인 디지털 통합 플랫폼 제대로 사용도 못 해 예산 낭비”

도의회 행정국 행감

3개월 만에 명칭 변경 등 논란

“포털서 앱 검색도 안 돼” 지적

◇문관현 의원

◇임미선 의원

강원도가 51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 ‘나야나’가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3개월여 만에 공식 명칭을 변경하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국민의힘·태백) 의원은 9일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0억원 정도가 투자돼 만들어진 앱이 최근에 ‘우리도’라고 명칭이 바뀌었다”며 “공공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취지인데 홍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포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못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나야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됐다”며 “도민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앱에 수십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일섭 행정국장은 “명칭 변경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처음에 단순한 기능을 활용할 때는 ‘나야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다른 업체에서 등록을 해 놓아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더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총 개발비 51억5,000만원이 투입된 ‘나야나’는 올 4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출시한 비대면 민원통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난달 명칭을 ‘우리도’로 변경, 논란이 일었다.

강원도 전입 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도와 18개 시·군의 교류 상생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전입 시험을)시도했다는 이유로 소위 한직으로 발령 낸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9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2022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춘천MBC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강원도-국회의원, 내일(10일) 내년 국비 확보 방안 논의

강원도가 내일(10일) 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 등 20명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홍천~용문 철도 건설 등 강원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KBS 춘천

2022년 11월 09일 (수)
강원

강정호 도의원 “강원도 4년 동안 면세유 점검 안 해”

강원도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면세유 점검을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2018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등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요령'에서는 지자체장이 면세 유류 판매업소에 대해 부정 유통 등을 일 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2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상수 삼척시장은 9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인재개발원 삼척시 건립을 건의했다.

"해경 인재개발원 삼척시 유치" 김진태 지사·박상수 시장 건의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면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상수 삼척시장은 9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삼척시 건립을 건의했다. 또 삼척시민 7,509명의 주민 동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여수 방문에는 김 지사, 박 시장을 비롯해 심영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동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올 9월 인천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을 만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의 삼척 유치를 고려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올 8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지로 삼척시와 충남 당진, 보령이 선정돼 다음 달 중 최종 부지가 선정된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삼척시에 건립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삼척시는 교통, 타 교육기관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삼척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4면

도·삼척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유치 총력전

김 지사·박 시장 서명부 전달
동해해양경찰청 시너지 강조
2027년 준공 목표 내달 부지 발표

김진태 도지사와 박상수 삼척시장 등은 9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삼척시 유치를 건의하고 주민동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연간 7000명이 방문하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삼척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삼척시는 물론,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가 총력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태도지사와박상수삼척시장은 9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삼척시 유치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시민 75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유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권정복 삼척시의회 해경인재개발원 특별위원장이 동행했다.

삼척시는 해경 인재개발원 후보지인 교동 일원이 삼척·증산 해수욕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인근에 동해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장과 수련원이 있어 각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동해안 4개 해양경찰서와 18개 파출소, 항공단, 특공대 등을 관할하는 동해해양경찰청이 있어 해경 인재개발원 운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여기에 삼척과 근덕, 맹방 등 해변에서 해상교육을 항시 실시할 수 있고, 삼척항과 동해항 등 여러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강원대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강원요트면허시험장과 연계한 해양스포츠 교육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24년 포항~동해간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기간철도망이 구축되고, 평택~삼척간 고속도로가 오는 2030년 개통되면 서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다, 서울과 동해를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가 삼척까지 연장될 경우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진태 지사와 박상수 시장은 지난 9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를 건의한데 이어 삼척시의회는 해경인재개발원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고 강원도와 도의회,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 지역사회 등 모두 유치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경 인재개발원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7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며, 이 곳에는 행정직원 120명과 교수 60명이 상주하고, 전국 해양경찰관 7000여명이 매년 방문해 교육을 받게 된다. 최종 부지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양국제공항을 방문해 김태수 양양공항장으로부터 공항의 현황을 보고받고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등 시설을 점검했다. 최 훈·구정민

연합뉴스
2022년 11월 09일 (수)
사회

김진태 강원지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건의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삼척시민 서명부 전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와 삼척시가 9일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영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주민 동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해양경찰청은 연간 7천 명, 1일 최대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강의동, 식당, 훈련동, 사무실 등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2027년까지 준공하고 전문 교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지로 삼척과 충남 당진.보령을 선정하고, 다음 달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월에도 해양경찰청을 찾아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를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삼척시는 교통과 타 교육기관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삼척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찾은 김진태 강원지사(왼쪽 첫 번째)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mz@yna.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지역 10면

춘천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춘천소방서(서장:주진복)는 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주진복 소방서장, 박기영 도의원, 양숙희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지역 13면

평창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평창소방서의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9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최영수 서장, 지광천 도의원,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지역 11면

횡성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 횡성소방서는 9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김명기 군수, 최규만 도의원,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권혁세 횡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최미향 횡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소방대원, 의소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지역 15면

양구소방서 소방의날 기념행사 양구소방서 제60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가 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 김동기 소방서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박귀남 군의장 등 단체장과 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지역 13면

평창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이용, 청주를 제조하는 한빛 청주공장 준공식이 9일 오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현지에서 열렸다.

평창 한빛청주공장 준공… 지역쌀 날개단다

한스팜, 군전업농연합회 협약

평창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이용한 청주 제조공장이 준공돼 지역 쌀 판로확대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한스팜(대표 한태원)은 9일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현지에서 김영균 평창부군수, 지광천 도의원, 김성기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 청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한 한빛 청주공장은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군비, 자부담 등 모두 15억원을 들여 청주 제조공장 505㎡와 자재보관창고 165㎡, 도정기와 증미기, 누룩제조기, 발효탱크 등 설비를 갖추고 지난 6월 청주 시제품을 생산했다. 특히 이 공장은 평창쌀전업농연합회와 협약을 체결, 양조에 필요한 쌀을 계약재배해 지난해 16t, 올해 25t의 쌀을 수매했고 앞으로 청주 제조물량이 증가하면 쌀 수매를 늘려 지역 쌀 판로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빛 청주는 현재 지역 관광지 등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국내 백화점과 전통주점, 대형 마트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與 춘천갑·원주을 당협위원장 선출 속도

국민의힘 조강특위 첫 회의

66곳 위원장 추가 공모 결정

오는 17~18일 서류접수 예정

기존 후보 춘천 3명·원주 6명

2곳 다 경쟁자 더 늘어날 전망

속보=국민의힘이 춘천갑·원주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추가 공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9일 당사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당협위원회(당협) 69곳 가운데 66곳 지역에 대한 위원장 추가 공모를 받기로 결정했다.

당협위원장직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공천 후보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춘천갑·원주을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진태·이강후 당협위원장이 각각 강원도지사·원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위원장이 공석(본보 지난 3일자 3면 보도)이 됐다.

그 후 국민의힘이 올 6월 춘천갑·원주을 2곳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춘천갑에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강대규·김혜란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했다.

원주을에는 권이중 변호사,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안재윤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등 6명이 신청한 상태다. 기존 신청자들은 이미 왕성한 지역정치 활동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얻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 공모가 이뤄지게 되면서 춘천갑에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 원주을에 최재민 강원도의원이 신청서 제출 의사를 비쳐 경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와 최재민 강원도의원은 이전 총선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돼 왔기 때문에 기존의 후보들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강특위는 10~16일 사고당협 6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공고를 한 후, 17~18일 이틀 동안 지원자들의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올 6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진행된 당초 공모에 신청했던 지원자 221명은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추가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지원 접수를 받은 직후 21일부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강특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다 같이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서울 노원병과 서울 강서병,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었던 김성원 의원의 경기 동두천·연천 당협은 제외됐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국힘 조강특위, 춘천갑·원주을 당협위원장직 추가공모

전국 사고당협 66개 지역

차기 총선 경쟁 심화 전망

속보=국민의힘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원주 을 등 전국 66개 사고 당협에 대한 추가 공모(본지 11월9일자 3면)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내 춘천 갑, 원주을 당협위원장직을 둘러싼 차기 총선 구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사고당협 69개 중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가 된 3개 지역을 제외한 66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공모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선 "5~6개월 전에 서류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의 경우, 춘천 갑과 원주 을이 대상 지역이다.

춘천갑에는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강대규·김혜란 변호사 등 3명이, 원주을은 권이중 변호사,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안재윤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등 6명이 지난 5~6월 공모했다.

추가 공모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최성현 전 도의원이 춘천갑, 최재민 도의원이 원주을에 추가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다.

최성현 전 도의원은 "윤정부·김진태 도정·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이 3박자가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겠다"고 했고, 최재민 도의원도 "젊은 패기와 신선함을 앞세워 더 강한 당협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1면

국방부 수의계약 비율 묵묵부답, 군납농가들만 답답

100% 원상복구·70% 유지 건의
지난달 국방부 "70% 유지" 불구
내년도 조정 관련 무응답 일관

속보=군(軍)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한 국방부가 접경지역 농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수의계약 비율 조정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9일 본지 취재결과, 2022년 2분기 군납농축산물 공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피해가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당초 국방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도 수의계약 비중은 50%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접경지역 군납농가의 이중삼중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와 도내 접경지역 농가들은 수의계약 '100% 원상복구' 또는 현재 수의계약 비중인 '70% 유지'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년도 수의계약 조정과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군급식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세부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군급식에 완제품 김치만 보급되면서 배추·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임가공 김치 납품 당시에는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산 무, 배추가 김치의 원재료로 활용,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했으나 제품 김치 납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판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납품 방식 변경에 따라 납품단가 역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배추 1kg 군납 단가는 866원이었다. 그러나 김치생산업체와 접경지역농가간 최근 체결한 계약의 납품단가는 320원으로 결정, 544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가들은 "납품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유통비, 손폐율 등이 제외된 단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도관계자는 "접경지역 농가들은 배추 1kg당 적정 단가를 4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적정단가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오늘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 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승환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2면

제주 특행기관 국가환원 움직임…도, 이양 손익계산 분주

원주환경청 이양 중단 등 고민
환경규제 허가 권한 장점 불구
이관 따른 예산 부담은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원주환경청 등 특행기관 이양을 추진 중인 강원도도 이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등 7개다.

제주도가 특행기관의 다시 국가 환원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비 지원은 감소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특행기관 이양에 대한 실익을 따지고 있다.

특행기관 이양과 관련, 도는 원주환경청, 북부·동부산림청 등 환경·산림분야 특행기관 이관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상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가량을 차지, 산림과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해당 특행기관에 대한 이양 검토는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규제 등에 따른 허가 권한을 도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장점이지만, 국가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 등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개 특행기관을 이관받은 제주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라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원(국비 1899억·지방비 323억)에서 지난해 2297억원(국비 1235억·지방비 162억)으로 지방비 부담이 9년새(739억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권한 최대 확보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사례를 비춰봤을 때 특행기관을 한 번 가져오면 환원하는 것도 쉽지않은 만큼 실익을 최대한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1면

중앙·지방정부 채권 최대 상환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전망

내년초 만기도래 지방·공사채
강원도내 1분기 491억원 집계
전국 41곳 2조6000억원 상환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기로 해 '레고랜드 쇼크' 사태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 내년 1분기 상환액은 강원도 몫 445억원과 춘천 등 3개 시·군 상환액을 포함해 총 491억원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26개)의 2조 9117억원이다. 행안부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적지않게 요동쳤던만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후속조치다.

올해 말까지 상환이 필요한 지방채 규모는 6334억원, 내년 1분기는 2조 2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내 지자체의 올해 지방채 상환액은 29억원(강원도 27억원·원주 2억원), 내년 1분기 상환액은 강원도 몫 445억원을 포함해 총 491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등 전국 41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2조 9117억원 가운데 2조 6758억원(91.9%)을 상환 시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선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2721억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 반영을 주문, 즉시 상환토록 했다. 여기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2050억원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몫 지방채는 차환 없이 도의 자체 재원만으로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 재정 부담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18개 시·군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1년 결산기준 1조3600억원(내부거래 제외), 강원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164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지은 pje@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종합 03면

민주당 '레고랜드사태' 관련 김 지사 고발 검토

진상조사단 여당·정부 규탄

속보=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본보 지난 3·4일자 2면, 8·9일자 3면 보도)를 높이고 있다.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그 규모가 가히 경제적 참사라 할 만하다"며 "국민의힘의 염치가 실종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이 사태의 핵심은 채무가 아닌 불이행"이라며 "김진태의 무지와 무능으로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무너졌고, 그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조달시장이 더 빠르고 심각하게 얼어붙은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도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입으로 말한 적 없다며 억울해하는 김진태 지사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진태 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청 등 현장 시찰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법조타운 조성 무산되나

-두 사법기관, 상석 따지다 청사 따로따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석사동으로 이전 신축하면서 석사동 법조타운을 조성키로 했던 춘천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1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검과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동반 이전을 위한 춘천지검과의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이전을 결정했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게 이전 부지의 '상석'을 놓고 3년째 따지다가 결국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닥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비칩니다.

단독 이전을 발표한 지법 측은 20년 3월 법조타운으로 이전키 위해 춘천시·지법·지검 3자 간 협약은 이미 21년 말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법과 지검이 나란히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전국 18곳 중 법원과 검찰 청사가 분리되기는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더 높은 지대에 건물을 짓겠다며 3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 시선이 고울 수 없습니다. 3년째 '상석 타령'을 하는 두 사법기관의 행태는 국민이나 지역사회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업무 친연성이 있는 두 기관이 뚝 떨어져 있다면 당장 민원인과 관련자 불편이 야기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두 기관의 행보는 이해도, 납득도 어렵습니다.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춘천법조타운은 석사동 6만6200㎡ 면적에 부지조성비 476억원, 청사 신축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토지 소유주 국방부와 협의를 본격화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넘기게 됐습니다. 순조로웠다면 벌써 청사 준공을 앞둘 시점입니다.

전국 타시도 사례를 보아도 우측은 법원, 검찰은 좌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지 설계 제약으로 인해 토지 단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오로지 '우측 용지'를 고집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법과 지검 모두 건물이 낡고 내부 통로는 진입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로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모든 잣대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늙어가는 강원' 대안 마련해야

-고령화 가속 2030년 가구당 1.96명, 대책 절실

강원지역 가구 수가 2025년에는 70만을 돌파하고 2030년에는 가구당 인원이 2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강원도는 오는 2030년 10명 중 3명은 고령 인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에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내 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65만 2000가구에서 2025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역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는 2030년 1.96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명대를 넘지 못합니다.

문제는 가구 급증 추세가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수 증가가 주원인이라는 점입니다. 2050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는 45만 6000가구로, 30년 새 152.3% 대폭 증가합니다. 노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역마다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통계와 전망은 앞으로 일어날 사회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업 쇠퇴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문제가 나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한 생산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화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청년층 유입 정책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산업을 성장시켜 젊은 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자연 유출을 당연시하고 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돼야 합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 등 미시적 정책을 넘어,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요구됩니다. 노인 일자리와 의료 기반, 휴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도 성장시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더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 절규 귀 기울여야

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가파른 이자 부담에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이들의 몰락을 외면한다면 결국 이는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올 7월 신공장 착공에 나선 춘천 A중소기업은 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두 배가량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2.8%였던 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7%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다.

특히 올 6월 0.27포인트, 7월 0.30%포인트, 8월 0.29%포인트 등 3개월간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출 규모는 둔화되고 있다. 올 들어 도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5월 3,557억원으로 최고를 찍은 이후 6월 2,479억원, 7월 1,349억원, 8월 2,543억원 등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100곳당 16곳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계기업 비율은 올 연말엔 19%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그동안 초저금리로 근근이 버텼는데 경기 둔화와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불어난 데다 이자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빠른 속도로 부실에 내몰릴 것이다. 채무 재조정 제도 확충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한계기업 지원책이 시급하다.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준다. 여기에다 빚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곳도 나올 것이다. 가계 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서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 18조원 늘어난다. 코로나 와중에 빚으로 연명했던 중소기업, 초저금리 시대에 빚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에 투자했던 젊은 층에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 취약계층의 채무 구조조정 및 구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가라앉게 만든다.

대출 금리 3개월 새 두 배 오르자 줄도산 위기
금융 취약계층·한계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각종 규제 풀어 민간에 활력 불어넣어야 할 때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 진행되는 복합위기 앞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많지 않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낮출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재정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 금융·재정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뿐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각종 장벽과 문턱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면서 혁신의 힘으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코로나19 재유행, 무뎌진 경각심 바로 세워야 할 때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 내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8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46명으로 올 9월14일 2,637명 이후 최대 일일 확진자를 기록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올 9월 유행 감소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1,000명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10월25일 1,657명을 기점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8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2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일 19명에 비해 8명이 많아졌다. 병상 가동률도 68%로 집계됐다. 전체 병상 106개 중에서는 60개 병상에 확진 환자들이 입원 중이고, 가동률은 57%로 약 3분의 2가 차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방역조치 완화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다. 또 올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데다 새로운 변이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한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7차 대유행을 막는 방법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래 접종률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전체 인구 대비 3% 안팎에 그치고 있어 걱정이다. 여기에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확진자 수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7차 대유행 정점을 11월 말이나 12월로 보고 있다. 하루 최대 20만명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정부의 판단과 확진자 증가는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다. 모두가 다시 긴장해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면 확산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험생들은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교육 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보다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